**대학주보** | 제1721호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8 교육

## 강사 처우개선, 등록금 동결·국고지원 중단으로 어려운 상황

0 지수 기자 ssu1404@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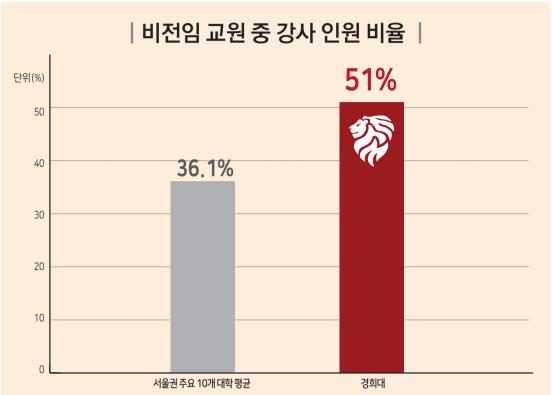
강사 처우개선 - 2회

구성원으로서 인식 개선과 재정 확대 방안 수반돼야

강사 처우 개선은 대학의 전반적 인 재정 상태, 학교 예산의 우선순 위 설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9년 강사법 시행 이후 교육부는 강사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우려와 사립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사업' 예산을 지원해 왔다. 해당 예산은 강사의 방학중 임금과 퇴직금 지원 용도다. 하지만 정부는 '강사 처우개선은 사립대 책무'라는 입장으로 작년부터국고 지원을 중단했다. 우리학교는연간 약 13억 원 정도의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교비로 부담하고, 향후에도 지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우리학교는 강사 비율이 전체 교 원 중 32%로 타 대학보다 높은 편 이다. 다만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전임교원 담당 강의 비율은 평균 56.9%이며, 우리학교는 59.6%로 평 균을 상회한다. 이는 비전임 교원 임용 정책이 타 대학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예시로 우리학교는 비전임 교원 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 40.4% 중 강 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27%인데 반 해 성균관대는 41.3% 중 강사가 담 당하는 비율이 10.1%로 매우 낮다. 이는 성균관대에서 초빙교원이 담 당하는 비율이 18.4%로 높기 때문 이다. 초빙교원은 근무 기간 1년 이 상 계약, 매월 정액 보수, 건강보험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비전임 교원 대비 강사 비율 평균은 36.1%인데 반해 우리학교는 51%다. 이는 비전임 교원 임용 정책이 타 대학과 조 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정한 강사 처우 개선은 강사를 대학 내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인식 개선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가입,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단과대학 중 강사 수가 가장 많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김진해 부학장은 우리학교 비전임 교원 임용 정책에 "재정적 이유가 제일 크다"며 "비전임 교원 중 처우가 그나마 나은 객원교수는 2년 후엔 무조건 나가야한다고 하니, 후마처럼 교육의 연속성이 필요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임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비정규교수 노동조합 김진균 부 위원장은 강사 문제의 근본 원인으 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꼬집 었다.

강사 강의료와 적정성, 인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사립대에 지원했던

강사 처우 개선 예산같이 실질적인 재정 확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공립 대와 사립대 강사 간 임금 격차는 상당한 수준이기도 하다. 서울권 50개 대학 내 국공립대 평균 강사료는 90200원이지만 사립대 평균 강사료는 52700원 수준이다. 이 중 우리학교 평균 강사료는 11년째 51000원으로 사립대 평균 강사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강사 처우 개선은 강사를 대학 내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인식 개선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목소리 도 있다. 현재 강사가 대학 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없다. 교육, 예·결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대학 평의원회의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총장이 위촉하는 교원 8명의 자격 요건은 '교원 중에서 교수를 대표하 는 교수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다.

교양 대학의 특성상 그나마 강사지위가 인정되고 있는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필수과목 교원(강사 포함)들이 워크숍 시간을 가지며 교과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마또한 교육과정 개편 등에서 강사의 참정권은 없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문제만이 아니라 교과 과정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예산팀은 "상당 기간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의과대학 보유) 중 최 하위 수준으로 등록금을 동결하면 서도 교육의 질은 유지하고,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 력해 왔다"면서도 "지속적인 물가 인상(전기 및 수도료 등 공공요금, 시설 유지 보수 비용 등)으로 어려 움 속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 어 "강사법 시행 이후로도 강사 강 의료의 적정성과 인상 가능성에 대 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이슈이나 등록금 인상, 국고보조금 등 재정 확대 방안이 수반되지 않는 다면 해결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 며 "대학 강사료 문제 관련 추후 교 내 구성원과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 고,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 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